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와 각 대학의 발전전략

구 병 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와 그 전망

때는 이미 20세기 종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21세기를 전망하는 논의와 대책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육 역시 시대적 도전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변신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은 그 조직 특성으로 보아 자칫 진부하고 보수적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사회선도적 기능을 갖는다는 대학들이 무성한 논리나 반론 속에 묻혀 정체되고 있을 때 격변하는 현대사회는 대학을 앞질러가고, 기민하고 경쟁적인 기업들의 기술변화를 대학이 외면하고 있다면 대학은 사회적인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된다. 선진 외국에서도 한때 대학이 막대한 재원을 소비하면서도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의 자성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금은 대학발전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갖가지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뒤떨어지고 침체된 채, 그 후진성 극복을 위한 전환기적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체제분석과 병리적 진단 및 처방도 중요하지만, 우선 각 대학이 자기 체질과 위상 그리고 사회적 좌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비판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 날로 변모하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추세와 함께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학생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부단한 자기갱신과 교육개혁 없이는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수록 심각한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이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개별대학들의 현상적 실태와 상황을 경영적 측면(efficiency)이나 역할의 적합성(suitability)이란 측면에서 자기진단하고 처방을 마련해야 할 당면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체제가 그러한 계기를 조성해 주는 데 일조가 되고 있음을 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교육환경이나 대학체제의 변화는 광범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요한 것만을 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교육 민주화와 대학 자율성의 신장과 그 정착

반세기 미만의 우리나라 대학사에서 대학교육은 그동안 많은 규제와 계도적 행정체제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의 핵우산 아래에서 안주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와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 등으로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리면서 창의적 발전과 자율적 성장을 해야 하는 대학이 획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일부 자율역량이 있는 대학의 경우 발전에 큰 장애와 제약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의 민주화가 강조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당분간 이로 인한 마찰이나 갈등이 다소는 있다. 그러나 인내와 관용으로 극복해 갈 때 모든 대학들은 이를 정착시켜 새로운 대학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의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은 대학교육의 지고한 전통이며, 지금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람직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주화나 자율이 무율(無律)과 방종은 아닌 것이며, 고도의 책무성과 수준높은 자기통제의 방벽이므로 이를 위한 자질과 역량이 전제된다. 늦어도 금세기 안에 그동안의 오도된 자율화나 성급한 개혁들이 스스로 조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교육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원 조성을 위한 대학정책으로의 전환

대학의 자율적 경쟁체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원칙적으로 찬동하지만, 여건의 성숙이나 경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엄청난 폐단과 역기능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오랜 세월 획일통제의 굴레에서 거의 자율능력을 상실해 있다가 시대적 조류에 밀려 교육의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화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실상이나 교육의 여건을 자율적 경쟁으로 방치하기에는 그 선행조건들이 전혀 성숙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경쟁은 어느 정도의 기반 구축이나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것이지, 성장 과정의 보호나 지원·육성 없이 바로 경쟁 속으로 방기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나 풍토 그리고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육성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렇다고 대학발전의 기제가 되고 있는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유보하자는 뜻은 아니다. 당분간 일반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서서히 경쟁적 성장을 유도하는 양면정책이 아쉬운 것이다.

따라서 규제와 감독 등 소극적 대학정책이 이제는 보호와 육성 및 조장의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공감하면서 이는 미래의 대학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징벌이나 행·재정적 조치 등은 더욱 강화됨으로써 모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3) 대학교육체제의 다양화·실질화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규격화, 획일화 및 경직화의 인습에서 벗어나면서 모든 분야가 다양화·실질화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실 '대학 평준화'라는 주장이나 좁은 의미의 '수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모든 대학들의 '일류대학의 꿈'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직업세계가 분화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학들도 그 수요와 기대에 맞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모델, 여러 계층의 대학체제가 자리잡아 가야 한다. 규모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의 소규모대학(Miniversity), 지역중심대학(Communiversity), 중규모대학(University), 대규모대학(Multiversity) 그리고 국제성을 띤 초국가적 대학(Globersity)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쯤은 파리 대학이나 런던 대학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과 같은 범세계적인 대학이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원과 연계되는 연구중심적 대학, 학부중심대학 및 직업지향적 대학 등의 특성과 교육체제가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학들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사회적 수요를 가치롭게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며, 그 존재 가치에 우열을 가리려는 계서적 의식은 금물이다. 이제 모든 대학들은 그 프로그램과 교육체제를 고객인 학생들의 희구와 요망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각 대학은 우수학생 유치보다는 받아들인 학생들의 개발이나 성장(부가가치의 극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4) 교육기회의 보편화·개방화의 불가피성

민주국가, 복지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고등교육기회나 대학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유도할 수는 있되 이를 억지할 수는 없다. 이미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열 속에서 대학정원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과 논란이 있다.

외국과 같이 대학 지원자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지원자가 낙방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당분간 입학정원의 증원과 개방적 교육체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에 제기될 학사운영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살려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이라는 비인간적 개념을 배제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대학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0년까지 동 연령 인구집단의 60% 이상으로 대학인구가 확대될 전망이며, 수학연한의 조정이나 일반대학과 개방교육체제의 연계 등을 통한 경직성의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정원관리와 학사운영상의 경직성 배제

대학의 입학정원이나 학위등록제 등은 규제적 대학정책의 상징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성장과정에서는 필요한 장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화 정책에서는 대학의 자기통제라는 견지에서 그동안의 필요악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학위등록제는 정부의 대학불신과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과정의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전면적 폐지에 따른 폐단이나 일

부의 부작용 등은 적정한 행정지도나 감독 그리고 대학평가제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하여 능히 통제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편입 제도에 대한 규제나 대학원 정원 규제, 복학, 재입학 등 모든 학사운영에서의 획일적인 금지와 제약 등이 대폭 해소되고 점진적으로 각 대학에 일임되어 각 대학이 그 대학의 사회적 신뢰나 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그리고 대내적인 자기통제의 범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6) 교육조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활성화와 외부지원 체제의 정착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체제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정부 시책과 의무교육의 확충 및 보통교육 위주의 투자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예산 중 교육투자의 비율이 국민 총소득의 4.0%에 불과하며, 교육비 중 고등교육비의 비중은 10.2%에 불과하다(학생인구는 16% 수준).

따라서 총운영비의 60% 수준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재정구조도 취약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000 달러 수준에 머물러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이는 학생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1990년도부터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나 융자제도가 시작되고 국립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대학사회는 점차적으로 외부의 지원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가 성숙해가면서 정부에만 의존하던 각 대학의 지원체제가 지방자치단체도 한 몫을 하는 방향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 공납금이나 명목뿐인 법인이나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갖가지 모금이나 산업체의 지원 유도, 재정운용의 합리화 등 자구적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교육재정 5%와 관련하여 대학에 대한 외부지원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각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그동안의 재정난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어 교육의 양보다 질적 수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교육의 질과 그 생산성 보장을 위한 대학평가제도 정착

대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국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 운영체제의 합리화는 더욱 강조되어 마땅하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대학 운영에서도 그 체제분석적 접근을 통해 운영 합리화와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각 대학의 자기성찰과 교육개혁을 위한 의지 속에서 실현될 수 있고 이원적인 대학평가체제(계열별 평가, 대학종합평가)나 교수평정제도 등을 통해 이를 점검·촉진해 가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대학사회의 자기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평가제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산·학·연·관의 협력과 대학간 협동의 강화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하나의 병폐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각 기관간의 협력 부족에 있다는 중론이다. 대학교육은 그 기능인 교

육과 연구 및 봉사에서 산업계나 연구소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직 그 협력이나 연계체제가 미약한 입장에 있다.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개발이나 유용한 고급인력 양산이라는 책무를 안고 있는 대학은 이제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과 국책 및 기업연구소와 연구협력 및 이를 통정·지원해야 하는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간의 기술장벽이나 무역마찰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시대라는 변화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간의 경쟁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교류하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학간 협동(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역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자기 특성이나 비교우위적 장점을 살려가면서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허실을 배제하면서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그 생산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려는 선진국 모형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대학 주변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대학 진학인구의 감소와 외국 대학들의 진출에 따른 학생 모집 경쟁의 심화는 일부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연령구조가 갈수록 고령화될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능히 짐작된다. 나아가 극심한 국제경쟁이나 산업발전에 유용한 인력 공급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기법에 가히 혁명적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다.

2. 각 대학에서의 발전전략

위와 같은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는 개별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발전정책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각 대학은 21세기의 사회변화와 대학을 위요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그 대학의 존재의미와 사회적 역할 분담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 대처방안에는 전체 대학교육의 정책이나 외부 사회와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학내에서의 발전전략에만 국한하여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새로운 대학관의 정립

세계적으로는 비록 1000년의 대학사를 지녀왔다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 대학의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그 존재형식은 꾸준히 변모되어 왔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대학들은 역사가 오랜 대학까지도 이 시대 이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적응하고자 꾸준히 변화와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모든 대학 구성원이 우선은 '상아탑'이라는 전통 대학에 대한 향수를 과감히 불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학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상층계급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만인에게 개방되고 지식과 정보에 목마른 모든 이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대학마다 특색이 있고 프로그램은 서로 다를지라도 필요한 모든 사람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론과 지식만이 아닌 교양이나 기능 그리고 각자의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인간개발과 성장의 요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연구중심적이고 교수 위주였던 폐쇄적인 전통 대학의 시각으로 오늘의 대학을 관조하는 일부 학자들의 대학관은 설땅을 잃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2) 각 대학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그 유지

우리나라 각 대학들의 모습은 중앙집권적이고 군사문화적인 획일성과 유사성으로 대변된

다. 따라서 본래 지녔던 특색이나 학풍마저 퇴색해버렸다는 비판이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대학교육의 다양성과 각 대학의 특성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사회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은 그저 학업성적 우수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만이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개발이나 학업성취에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각 대학이 특성에 따라 그 대학의 위상이나 좌표를 스스로 설정할 때 대학교육의 다양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수의 규모, 대학원과의 연계체제 그리고 대학 기능과 관련된 교육·연구 및 봉사 면에서, 비중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각 대학의 이념과 목표가 달라지며, 대외적으로는 선호집단과 진로가 서로 달라야 한다. 특색없는 평범한 대학들이 대학 상호간의 경쟁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학생소비자 시대(students consumerism)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3) 특성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교육과정개혁

대학의 특성이나 정체성의 확립이란 한 대학의 존재가치에 대한 연역적·귀납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과이며 지양(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 변증법적 결단이다. 한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기 몫을 찾고 현주소를 정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은 퍽 어려운 역사적 작업임에 틀림없다. 학내·외적인 여건이나 제약,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압력, 학생소비자들의 여망과 희구,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란 측면에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설득과 절충의 과정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당국의 역량이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향이 설정된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인적 구성 및 프로그램이 새로 정비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의도적인 교육의 한 과정이며, 대학의 이념이나 추구하는 목표는 대학의 모든 분야에 침투되어야 생산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그 대학의 개성은 조직과 구성원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만 특성이 될 수 있다.

4) 적합한 학생선발과 진로지도 및 졸업후의 추수지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들이 특성 없이 획일화되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만을 뽑으려고 경쟁하는 현재의 입시풍토는 비교육적·비인간적인 단면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각 대학마다 특색이 있고 프로그램이 서로 다를 때 거기에 알맞은 학생들의 진학유도가 이루어져야 다양화 사회의 서로 다른 인재육성이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 외국처럼 일부 대학만이 입시경쟁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전원입학제가 사실은 대학입시의 이상적 목표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각 대학은 그 대학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유도하고 포용하기 위해 충분한 PR이나 광고 및 학생모집 활동을 하고 재학중에는 그들의 성취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각 대학들이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와 그 관리 또는 재교육(recurrent education)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졸업생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서비스에 역점을 둘 때 그 대학의 존립의미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5) 각 대학의 특성유지를 위한 기획통제체제 확립

기업형 대학(complex enterprise)이라고까지 부르는 현대 대학은 이제는 대학 운영 전반에서 경영적 기법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획 통제와 내·외부 평가체제가 정착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수많은 지원자가 모여 입

학을 애원하던 시절에서 이제 학생을 찾아나서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학생들에게 특별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관계가 이제 고객만족과 수요자 중심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와 보호 아래 안주하면서 이 정도나마 발전해 온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고독과 자유'가 아닌 '경쟁과 협조, 균형과 조화'라는 현대적 가치의식을 바탕으로 변신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세기말적 긴박감을 슬기롭게 승화시켜 갈 수 있기를 희구하면서 끝을 맺는다. ☛

구병림/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 건국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교환교수, 대교협 전문위원 및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의 변화추세와 학생소비자 시대를 위한 대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